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1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8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17.(월)	담당부서	무역구제정책과
담당과장	정해권 과장(044-203-5850)	담당자	김현아 사무관(044-203-5859) 박종희 사무관(044-203-5849)

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발효 대비, 무역구제제도 정비

-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문승욱)는 「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**」(이하 '불공법') 일부개정령이 1.18(화)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

<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* 개요 >

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

□ FTA(자유무역협정)와 유사한 **자유무역협정**의 하나로, 양국간 **상품·인력 이동 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·협력까지 포함**하며, **아세안+5*(15개국)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협정**

* RCEP 서명국: ASEAN 10개국(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)+ 非ASEAN 5개국(한국·중국·일본·호주·뉴질랜드)

◇ **(시장개방)** 기존 FTA대비 상품·서비스 **추가 개방** 및 **일본과 신규 FTA**

- 상품: 한-아세안 FTA(79.1~89.4%) 대비 추가철폐(1.7~14.7%, 품목기준)

* 주력품목(자동차·부품, 철강 등), 중소기업 품목(섬유, 기계부품 등) 및 의료위생용품 등

- 서비스: 콘텐츠·유통·물류(아세안), 온라인게임(일본) 등 추가 개방

◇ **(규범)** 역내 **통일된 규범 마련** 및 선진적 **신통상규범 도입·강화**

- 원산지 기준 단일화, 투자시 최혜국 대우,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, 무역구제 등

※ 무역구제(Trade Remedy): 반덤핑, 상계관세,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고,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

□ 금번 개정은 **RCEP 발효('22.2.1.)에 따른 협정 이행**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① **FTA 세이프가드조치**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

- 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조치 시에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**RCEP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이행**

*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며, FTA 체결국이 아닌 WTO 가입국의 경우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(글로벌) 세이프가드 규정 적용

※ 세이프가드(Safeguards):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,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

【 협정별 세이프가드 주요 차이 】

	WTO	RCEP
근거	GATT 및 WTO 협정	RCEP 협정
대상	해당 물품 수출국 모두에 적용	RCEP 체결국 당사국
조치 수단	수입물량 제한, 관세 인상 등	관세 인상 등
조치 기간	최대 8년 미만(연장기간 포함)	최대 4년 미만(연장기간 포함)

② **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완화**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

- **조치 기간이 1년 이상**일 경우, **경감 조치 의무화** 국가 대상에 반영

□ RCEP 회원국은 **협정 발효 전까지 위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***하고 있는 바, 우리나라 기업의 **RCEP 역내 수출****시에도 **동일한 혜택 기대**

* 중국,일본,베트남 등 10개국은 기발효('22.1.1.) 되었으며,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은 발효일 미정

** 對RCEP 수출액은 2,543억불 ('20년 기준, 무역협회)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49.6% 차지

□ 아울러 **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**와 관련된 무역구제제도는 **사전통보 절차 등 협정내용**이 **「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반영**되어 시행될 예정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김현아 사무관(☎ 044-203-5859), 박종희 사무관(☎ 044-203-58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